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순 서

I. 기본방향	1
II. 예산안 전체모습	2
III. 재정 혁신	5
IV. 중점 투자방향	8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별첨) 분야별 투자방향	40

I . 기본방향

- ◇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 : 새정부 핵심과제 충실히 반영
- 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 ② 高성과에 집중투자하고, 低성과는 구조조정 → 성과 중심 재정운용

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 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

②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高성과 부문에 전략적 재정투자

-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 등 초혁신아이템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는 충실히 반영하여 국정철학 뒷받침
*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약자 지원, 국민안전에도 중점

③ 低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 ·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핵심과제에 재투자
-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

II. 예산안 전체모습

□ [총수입]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2조원 [+22.6조원]

-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5년 대비 +7.8조원 증가('25년 본예산 382.4 → '26년안 390.2조원)
* 세입경정(△10.3조)을 고려한 '25년 추경 대비로는 +18.1조 증가(+4.9%)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 증가('25년 본예산 269.1 → '26년안 283.9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원 [+54.7조원]

-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25년 본예산 2.5 → '26년안 8.1%)
-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2026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조원, %)

	'25년		'26년 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A)	2회 추경			
◇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 세외수입	269.1	270.3	283.9	+14.8	5.5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 예산	447.4	467.3	481.5	+34.1	7.6
· 기금	225.9	235.9	246.5	+20.6	9.1

□ [수지·채무] 관리재정수지 △4.0%, 국가채무 51.6%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이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p 상승한 △4.0%
-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5%p 증가한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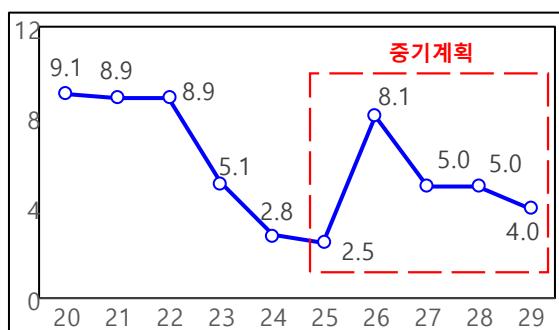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5년		'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1.7 (△0.8)	△60.8 (△2.3)	△53.8 (△2.0)	△32.1 (△1.1%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73.9 (△2.8)	△111.6 (△4.2)	△109.0 (△4.0)	△35.1 (△1.2%p)
◇ 국가채무 (GDP 대비)	1,273.3 (48.1)	1,301.9 (49.1)	1,415.2 (51.6)	+141.8 (+3.5%p)

□ [중기계획] 국가채무 '29년 GDP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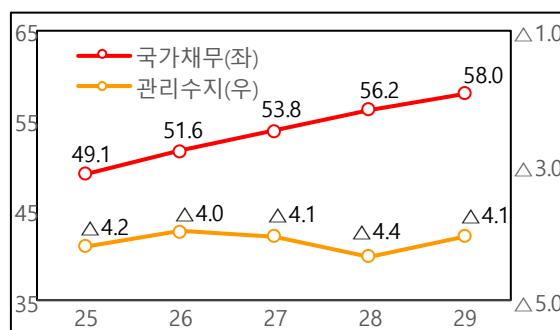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 수준,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
- 국가채무(GDP 대비)는 '29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 %) >



* 본예산 기준

< 중기 국가채무·관리수지(GDP 대비 %) >



* '25년은 2차추경 기준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구 분	'25년 본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 (B-A)	(조원) 증감률
◆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교부금 제외)	98.5 (26.2)	99.8 (28.2)	1.4 (2.0)	1.4 (7.5)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110.7 (43.6)	121.1 (51.7)	10.4 (8.1)	9.4 (18.6)

III. 재정 혁신

1

지출 구조조정

- (실적)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

* 지출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 (특징)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①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

②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

③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

④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제안 적극 반영

주요 사례	
① 경상비	✓ 공무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 효율화 ✓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절감(약 △500억원)
② 사업비	✓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 정상화 및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1.6조원) ✓ 좀비·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0.7조원) → 유망기업 집중 지원 ✓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감축(△0.5조원) → 국가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
③ 의무지출	✓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 ✓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구직)활동 인정기준 강화 → 도덕적해이 최소화
④ 국민제안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 조정(시간→활동별) → 취업지원 내실화 ✓ 장병수요 감안,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 → 전자책, AI 교육에 재투자

2 재정사업 지방우대

- **(시범사업 추진)**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
 -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 구분
 - (특별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 인상(예: 특별20%/우대10%/일반5%), 사업 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 차등화

구 분	현 행	우대내용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전국 공통)	특별12만원 / 우대11만원 / 일반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수령 시 특별·우대지역 +1만원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	비수도권 배분비중 70.4%('25년)	'26년 일자리 확대분(+5.4만개)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4.7만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Ⅱ유형)	-	특별720만원 / 우대600만원 / 일반48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2년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월 31.6만원	인구감소 50만원 / 비수도권 40만원 / 수도권 30만원 (Top-tier AI 융복합 과정 80/60/4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table border="1"> <tr> <th>(%)</th> <th>일반</th> <th>인구감소</th> </tr> <tr> <td>국비지원</td> <td>2</td> <td>5</td> </tr> <tr> <td>할인율</td> <td>7</td> <td>10</td> </tr> </table>	(%)	일반	인구감소	국비지원	2	5	할인율	7	10	<table border="1"> <tr> <th>(%)</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h>인구감소</th> </tr> <tr> <td>국비지원</td> <td>3</td> <td>5</td> <td>7</td> </tr> <tr> <td>할인율</td> <td>8</td> <td>10</td> <td>12</td> </tr> </table>	(%)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	5	7	할인율	8	10	12
(%)	일반	인구감소																					
국비지원	2	5																					
할인율	7	10																					
(%)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	5	7																				
할인율	8	10	12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자부담률 30%	특별10% / 우대20% / 일반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자부담률 15~55%(매출액별 상이)	특별5~40% / 우대5~45% / 일반10~50%																					

- **(통합지표 개발)**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 순차 확대

3 지방 자율성 제고

- (포괄보조)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25년 3.8 → '26년 10.6조원으로 3배 정도 대폭 확대
 - 지역적 사업 74개(47→121개, 5.7조원)를 이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 투자재원 추가
 - * (예) 도시재생, 하수관로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 로컬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 과소투자 우려 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지정(예)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경로당 등 6개 사업)
- (초광역권)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 ('26년) 사업설계를 위한 사업기획비 반영 → ('27년~) 본격적으로 추진

4 성과지향 출연연구기관 개편

- (과기계) 소규모 수탁과제(1,877개, 4,685억원)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100개)에 집중 투자
 -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하고, 사업 목표 조기 달성을 시 잔여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



- (인문사회계) 기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부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 → ①수탁과제 최소화, ②부처 의견수렴 의무화

IV. 중점 투자방향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51→72조원, +41%)

[1] AI 3강을 위한 대전환 (3.3→10.1조)	[3]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1.6→4.3조)
· 신규 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5조	·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1조
· 신규 AX-Sprint 300(생활밀접형) 0.9조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0.2조
· 국내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 등 0.6조	
· GPU 1.5만장 구매 2.1조	
[2] 신산업·R&D 혁신 (36.4→44.3조)	[4]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6.0→7.9조)
· R&D 역대 최대 증가(+19.3%) 35.3조 * A·B·C·D·E·F 첨단기술 고도화(10.6조)	· 신규 RE100 산단, 신규 분산형 전력망 0.3조
· 신규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1.0조	· 신재생에너지 보조·융자 확대 0.5→0.9조
·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1.0→2.0조	· 신규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 0.2조
	[5]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4.2→5.7조)
	· 한류연계 붐업 3.2조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5조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44→175조원, +22%)

[1] 지방거점성장 (19.0→29.2조)	[3] 촘촘한 사회안전망 (29.2→32.1조)
·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9조	· 기초생활보장 확대 22.5조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0.5조	· 장애인 돌봄·일자리 확대 4.6조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개 군) 0.2조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상담 지원 등 0.1조
·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1.1조	
[2]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	[4] 민생·사회연대경제 (17.6→26.2조)
· 아동수당 연령 상향(+1세) 및 지방 우대 2.5조	·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1.2조
· 신규 청년미래적금(납입금 6/12% 매칭) 0.7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 0.6조
· 신규 비수도권 취업청년 우대 0.9조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0.2조
· 신규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0.1조	
	[5]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16.0→17.6조)
	· 산업재해 예방 필수설비·인력 지원 0.3조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7조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5→30조원, +18%)

[1] 재난 예측·예방·대응(3.9→5.8조)	[2]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1.2→23.8조)
· 풍수해정비 등 재난 대응 2.6 → 3.3조	·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 3.2조
· 신규 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등 276억	· 남북협력기금 확대 0.8 → 1.0조

①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

3.3→10.1조원

【AX】 “산업·생활·공공 전분야 AI 도입”

0.5→2.6조원

- (산업)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 집중 투자(0.5조원, 5년간 6조원)
 - * 주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
 -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선도

	주요 내용	사업 예시
• AI 로봇	✓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로봇 핵심부품 개발·상용화	· 글로벌 AX혁신 기술개발 (총사업비 5,510억원)
• AI 자동차	✓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	· AX 실증밸리 조성 (총사업비 6,000억원)
• AI 조선	✓ 스마트항해시스템·기관시스템 무인화, AI 기반 항로표지 설치 등	·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총사업비 약 6,000억원, 잠정)
• AI 가전·반도체	✓ TV·냉장고, 지능형 홈서비스 등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총사업비 9,973억원)
• AI 팩토리	✓ 제조 데이터 수집·가공,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도입	·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총사업비 2조원)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및 대규모 AX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 촉진

- | | |
|----------------------------------|-------------------------------|
| • (광주) 에너지·모빌리티 AX(26년 240억원) | • (대구) 로봇·바이오 AX(26년 198억원) |
| • (경남) AI 기반 기계·부품 가공(26년 400억원) | • (대전) 버티컬AI 대전환(26년 1,594억원) |
| •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26년 400억원) | • (부울경) 해양·항만 AX(26년 370억원) 등 |

- (생활)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신규 AX-Sprint 300](#)” 추진(0.9조원)

* (예)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 (개요) 총 10개 부처* 참여, 제품별 10~40억원 출연·보조 + 2,000억원 융자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해수부, 국토부, 식약처
- (유형) Type1 :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145개, 기간 1년)
Type2 : 국민 활용도가 높고, 시장 파급력이 큰 품목(155개, 기간 2년)

- (공공) 공공 AX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확산(0.2조원)

구분('26년안)	주요 사업
• 공공 AX 프로그램 (1,000억원, 공모)	· (Track 1) 2년간 30억원 × 40개(20개 계속 + 20개 신규) · (Track 2) 2년간 100억원 × 5개(신규)
• 대국민 편의 제고 (370억원)	·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실시간 추천(총 355억원) ·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총 0.1조원)
• 국민안전·재난대응 (239억원)	· AI 기반 과학적 순찰 등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총 64억원) · 실시간 AI 화선 탐지 등 효율적 산불 진화체계 구축(총 30억원)
•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 (194억원)	· AI 활용을 통한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총 201억원) · 제조데이터 AI분석을 통한 공정관리·예측 등 지원(총 180억원)

- 대규모 NPU 테스트베드 확대(2→3개) 및 단계별 사업화 지원,
[신규](#) 공공 CCTV AI 전환 등 국산 NPU 수요 창출(0.1조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피지컬 AI 중점 사업	-	4,862	· 로봇·자동차·조선·가전·팩토리 등
- 공공AX 프로그램	(추경 150)	1,000	· 45개 사업 AX 추진
- 공공 선도 프로젝트	111	803	· 고용·복지, 납세, 신약심사 등
- AX-Sprint 300	-	8,920	· 생활밀접형 300개 제품 AX (출연·보조 6,920억원 + 융자 2,000억원)

【기반조성】 “전국민 AI 봄업, GPU 5만장 조기 확보” 27→7.5조원

- (인재양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고급인재 양성 확대,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전국민 AI시대 개막
 - AI·AX 대학원(19→24개교),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5→13개) 확대로 국내 고급인재 1.1만명 양성
 - *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생성AI 기업과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
 -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410→1,650명)하고, Top-tier** 등 직업훈련 과정 신설
 - * AI·이노아카데미(300→1,200명), AI마에스트로(110→450명) + 우수학생 해외 연수(80명)
 - ** 기업협력형 AI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 +1만명(기준유형 전환 0.6+신규 0.4)
 - AI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확산하고, 자격제도 신설, 경진대회 개최 등 AI Boom-up 추진

대상	초·중·고	대학생	연구자·전문가	청년·전국민
• On-Off 거점	4대 과기원, AI테스트베드, AI라운지, AI배움터 등			
• 프로그램	EBS	비전공생 활용 교육	심화교육	직업훈련, 군장병
• 경진대회·관련 행사	AI창작대회, 로보틱스챌린지	AI루키	AI챔피언	공모전, 퀴즈톡톡, 페스티벌

- (인프라) 최신 고성능 GPU 구매, 전주기(데이터·GPU·클라우드 등) 바우처 지급,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조성
 - (GPU)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 (바우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 통합바우처(20개사)를 제공하고, 기존 소규모 데이터·클라우드·GPU 바우처도 지속 지원(0.1조원)
 - (클라우드) 신규 국립·지방의료원 시스템의 AI-SaaS 개발 사업을 신설(150억원)하는 등 클라우드 가속화 추진
 -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개방하는 “신규 클러스터*(300억원)” 및 분야별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신규 스페이스** (120억원)” 구축
 - * 바우처 등으로 확보된 데이터, 민간·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공개
 - ** 표준·규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 (연구기반) 신규 AGI 준비 프로젝트, 신규 피지컬AI 선도기술, 신규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기반 조성

- (AGI) 민간 중심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업(SPC) 출자
- (피지컬AI) 제조·물류 등全분야에 활용 가능한 선도기술 개발
- (버티컬AI) 단기간 내 특화 모델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7대 도메인** AX에 필수적인 버티컬AI 개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부설 독립연구센터(대덕 본원/부산 센터 포함) 구성

** A(Quantum+Base AI), B(AI+Bio), C(AI+Culture), D(AI+Defence), E(AI+Energy+Material), F(AI+Factory+Mobility), G(AI+Green Intelligent Marine Technology)

	주요 내용	'26 예산
• AGI (범용인공지능)	· AGI 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주도형 SPC 출자	200억원
• 피지컬AI	·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全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적응·초성능 피지컬AI 선도기술 개발	150억원
• 버티컬AI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부설 버티컬AI연구지원(NAIS)를 신설하여 7대 도메인 버티컬 AI 개발	400억원

- (자금지원)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인력 확보	0.7조	1.4조	
- AI·AX대학원	335 (추경 100)	610	· 19 → 24개 확대
- AI 마에스트로	78	277	· AI 교육 참여수당 지급(100만원/월) 및 해외연수 제공 등
- AI·아노아카데미	51	451	
○ 인프라·연구기반 조성	1.9조	5.4조	
- 고성능 GPU 구입	- (추경 14,608)	20,841	· 1.5만장 추가 구매('25년 추경 1.0만장)
- 신규 AX 통합바우처 등	-	898	· 기업당 2년간 30억원 지원 등
- 신규 AGI준비 프로젝트	-	200	· AGI 준비를 위한 SPC 출자
- 신규 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	-	400	· 핵심분야 버티컬 AI 개발·최적화
○ 자금지원 등	0.1조	0.7조	
- AI 혁신펀드	450	1,000	· 민간투자 유도 AI기업 전용펀드 출자
- 딥테크·AI펀드	- (추경 1,500)	2,750	· 딥테크·AI기업 중심 전용펀드 출자

② R&D 확대,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36.4→44.3조원

【R&D】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 29.6→35.3조원

- (첨단기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 (A, AI)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1.1→2.2조원)
- (B, 바이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실증(1.3→1.6조원)
- (C, 콘텐츠) AI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IP기획 창작기술 개발(0.1→0.2조원)
- (D, 방산) 보라매(KF21), L-SAM-II,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3.1→3.9조원)
- (E, 에너지) SiC반도체, 태양광유리, LNG 화물창 등 핵심기술 개발·상용화(2.2→2.6조원)
- (F, 제조) 특수탄소강 기술개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0.4→0.5조원)

- 스마트팜·피셔리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 확대(0.7→1.0조)

- (민간연계) TIPS, 사업화보증 등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

- (TIPS) 지원 금액(일반 5→8억원, 스케일업 12→30억원) 및 기업(846→1,240개) 대폭 확대
- (사업화보증) 유망기업 대상 프로젝트 기반 신규 R&D 사업화 보증(0.3조원 공급)

- (인재) 첨단인력 3.3만명 확보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 (국내인재 양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2.7→3.1만명), 산학공동연구 강화
- (해외인재 유치)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640명, 5년간 2,000명)
- (우수인력 유출방지) 집단·개인연구 확대(과기원·일반대 700명, 신진연구 7→27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월 80/110만원), 신규 박사우수 장학금(연 750만원) 등

- (연구기반)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풀뿌리 소액연구 신설(2천개)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출연연(47개) 사업군	36,005	41,823	·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 추진
- TIPS 사업군	6,412	11,064	· 1,240개 기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 첨단인력 사업군	9,634	14,386	· 첨단분야 고급인재 2.7 → 3.3만명
- 개인 기초연구	19,053	22,657	· 1억원 미만 과제(0.5~0.8억원), 2천개

【 신산업 】 “100조원+ α 국민성장펀드 조성”

6.8→9.1조원

- (금융지원)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 지원 강화
 -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신규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적극 뒷받침
 - * 신규첨단산업 유니콘 육성(0.6조원), 재창업 기업 재도전(100→800억원) 등
 -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확대(4.7→7.5조원)하여 혁신기업 자금 공급
- (혁신창업) 첨단산업 특화 트랙 신설,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및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 등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 AI·딥테크 신규특화형 창업패키지*(+175개), 신규유니콘 브릿지** 사업(50개사)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AI·딥테크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지원(300억원)
 - ** 100억원 이상 선투자 받은 유망기업에 특화지원, 특례보증 패키지(최대200억원)
 - 대기업과 협업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523→600개)하고, 스타트업파크(+2개), 공유공장(+2개) 등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
- (기반확보) 신규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85억원)를 조성하고, 신규이차전지 원자재·소재(59억원) 평가·실증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민성장펀드	-	10,000	· 5년간 100조원 이상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	9,896	19,997	· 첨단산업(0.6조원), 재도전(100→800억원) 등
- 창업패키지	1,538	1,624	· AI·딥테크(신규175개), 투자연계(신규100개)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730	842	· 대기업(170→200개), 글로벌기업(353→400개)
-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	85	· 실증인프라 구축('26~'30, 2개소)

③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1.6→**4.3조원**

【통상대응】 “대미 관세협상 뒷받침”

0.03→**2.1조원**

- (한·미협력)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 차질없이 뒷받침(1.9조원)
 - 조선업 협력을 위해 신규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신규 함정 MRO 역량 강화 등 지원(708억)
- (관세피해 지원)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제공(약 800개사)
- (방산·조선) 중소조선사 대상 RG 특례보증을 2,000억 원 공급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 확대(200→300억)

【수출지원】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신설” 1.6→**2.2조원**

- (수출기반)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신규 K-수출스타 500)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 지원
 - (K-수출스타 500) 유망 내수 중소·중견기업에 마케팅·인증·R&D 등 지원(연 100개사)
 - (수출바우처) 현지마케팅, 중소 테크·물류 바우처 등 지원물량 확대(4,690→6,394개)
 - (인증·자금) 해외인증(605→630개사),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770→954개사)
- 신규 유통기업 해외 진출로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500억원)
- (공급망)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보조금(30~50%)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용자 확대(390→710억원) 및 신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38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 통상 대응 프로그램	-	19,000	· 산은·수은·무보 등 금융 패키지
-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	424	· 관세대응, 물류비 등 지원바우처 신설
- 신규 유통기업 해외진출	-	500	· 유통기업과 유망 소비재 동반수출 촉진
- 소부장 투자보조금	- ^{(추경)700}	1,000	· 지원규모 확대(^{25추경)700→1,000억원})

④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 뒷받침

6.0→**7.9조원**

【에너지 전환】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 2.8→**4.2조원**

-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자·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용자지원을 강화(지원율 80→85%)
 -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 저리용자(+800억원), 보증(+1,000억원) 확대
 - (영농형태양광) 유휴농지 매입을 확대(+1,700㏊, +0.7조원)하여, 설비투자 기반 확보
 - (전환지원)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총사업비 1.1조원) 추진
- (분산형 전력망)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규 ESS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0.1조원)
 -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 선제 구축(250억원) 및 신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702억원)

【탄소중립】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3.1→**3.7조원**

- (산업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201개사)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0.7→1.7만개) 등으로 탄소감축 기반 조성
- (보급확산) 신규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신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 *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에너지자립,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0.2조원)
- (녹색금융) 저금리 용자·보증 등 8.8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공급(0.8조원)하여 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3	6,480	· RE100 산단(120㎿), 햇빛연금(100㎿) 등
- 신규 RE100 산단 전력망	-	250	· 전력망 구축 촉진을 위해 250억원 지원
- 무공해차 보급	22,631	22,825	· 전기차 전환 지원금, 구매용자 신설 등
- 녹색금융 규모 확대	6,448	8,179	· 용자·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K-컬처】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1.3→1.8조원

- (콘텐츠)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력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0.8→1.2조원)
 - (정책금융) 문화분야 모태펀드,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융자·보증 확대(0.3→0.5조원)
 - (장르특화) OTT 특화 장편드라마(8→12편), 중예산영화 제작지원(9→18편)
 - (인력양성)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1,000명), 교육과정 융합운영 및 일괄 통합공고
 - (제작지원) AI 기반 영화·애니·게임·방송·예술작품 등 제작 지원(17→150편)
- (예술) 뮤지컬·문학 등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신설(250억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 적극 발굴
 - 대형 공연장 임차·제작·공연(12편) 및 해외 시범 공연(13편) 지원, 집필·번역·출판 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추진(10편)
 - 신규 청년 창작자 지원*(3,000명), 신규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50억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180→280억원) 등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
 - * 작곡가, 희곡·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가 대상 연 9백만원의 창작활동금 지원
- (글로벌 K-컬처 허브)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사업 통폐합으로 국외 「문화 수출거점+협업·연계」 시너지 극대화(0.2→0.3조원)
 - 베트남 코리아센터 신축(90억원), 통합형 허브 확대(6→11개소) 등 세계 주요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 거점 기지화
 - 고품격 체험·전시 신규 글로벌 홍보관 신설(11개), 콘텐츠·뷰티·푸드 등 신규 한류연계 융합 지원(319억원) 및 신규 한국문화 적극 전파(봉사단 1천명)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	4,650	· 대형 프로젝트 전략펀드 150→ 650억원
- 신규 청년 창작자 지원	-	180	· 청년 창작자 3천명, 1인당 9백만원
-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1,786	2,627	· 신규 글로벌 K-존·융합지원 525억원 · 신규 해외 문화봉사단 70억원

【한류 연계 봄업】 “K-관광·푸드·뷰티 등 봄업” 23→3.2조원

- (관광)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객 유치, 편리한 관광 환경 조성,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외래객) 국내관광 홍보(20→25개국), 신규 K-관광 패스(교통·입장료), 맞춤형 AI 안내
 - (지역관광)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 해주는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여행가는달 확대(연 2→3회), 글로벌 관광특구(2개소)
- (푸드)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단계 맞춤형 지원
 - 수출바우처 확대(460→878개사), 융자지원 강화(0.6→0.7조원), 복합 거점형 물류센터(50억원) 및 해외 모방품 대응(7개소) 지원
- (뷰티)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지원 및 생태계 강화
 - (생산) 신규 제조원료 국산화(50개사) 지원, 안전성 평가 컨설팅 제공(1,200개사)
 - (판매·유통) 신규 컨설팅·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 통합 프로그램(225억원) 신설, 신규 해외 공동물류기지 구축(美 2개소), 플래그쉽 스토어 확대(4→8개소)
- (제약·의료) 신규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0.2조원)

【문화향유】 “지방 공연·전시 순회 대폭 확대” 0.6→0.7조원

- (문화패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14→15만원) 및 청년문화 패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 * (장르) 공연·전시→영화 추가, (연령) 19세→19~20세, (금액) 비수도권 +5만원
- (지역문화)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약 3배 확대 (공연·전시 400 → 1,200회)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 외래객 K-관광 패스	-	28	· 4만명 대상, 5일권 기준 약 20% 할인
-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	-	65	· 20개 지자체, 여행경비 50% 지원
-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8	32	· 2개소, 지원 확대(1년간 2억원→2년간 30억원)
- 청년문화패스(지원금)	160	349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등
- 공연·전시 지방 순회	438	1,123	· 공연·전시 400 → 1,200회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AI	재정지원 규모	3.3조원	10.1조원
	인재 확보	0.8만명	3.8만명
	생활밀접형 AX	—	300개 제품
	고성능 GPU(정부누적)	2.0만장(추경기준)	3.5만장
신산업	R&D 규모	29.6조원	35.3조원
	국민성장펀드	—	100조원 이상 (5년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조원	2.0조원
통상·수출	통상 대응 프로그램	—	1.9조원
	조선업 글로벌 협력	—	708억원
	수출바우처	4,690개	6,394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융자·보조	0.5조원	0.9조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	최대 100만원
문화	K-콘텐츠 정책펀드	0.3조원	0.5조원
	청년문화패스	(장르) 공연·전시 등 (연령) 19세 (금액) 15만원	(장르) 영화 추가 (연령) 19~20세 (금액) 비수도권+5만원
	공연·전시 지방 순회	400회	1,200회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①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9.0→**29.2조원**

【 거점국립대 】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 0.4→**0.9조원**

- (집중육성)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26년 3개교 → 단계적 확대)
 - *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교당 400억원), AI 지역거점대학(교당 100억원) 등
 - 과기원·출연연·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지역허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국·사립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교육 협력, 장비 공유 등 동반성장 도모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3,956	8,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원. 신규AI 지역거점대학 300억원.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1,922→2,552억원. 신규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1,200억원. 고가연구기자재 162→486억원

【 전략산업 】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0.3→**1.0조원**

- (지역특화)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에 기반하여 R&D, 클러스터 조성 등 특화 지원

- (조선·방산, 동남권) 신규 함정MRO·클러스터(150억원), 신규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원)
- (에너지, 서남권) 신규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1,196억원), 신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245억원)
- (휴머노이드, 대경권)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577억원)
- (첨단과학·산업, 중부권) 신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25억원), 신규 첨단소재 AX플랫폼(22억원)

- (기반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2,251→2,553억 원)하고,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647→1,772억 원)
 -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①보조금 한도 상향(건당 150·기업당 200→건당·기업당 300억 원), ②(現) 대기업은 입지보조금 미지원 → (改) 지방이전 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③(現) 신·증설 투자는 입지보조금 미지원 → (改) 입지보조금 지원(중소·중견)
- (초광역권)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 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신규 초광역권 사업 발굴·구체화(50억 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1	2,553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신규 초광역권 사업 기획	-	50	· 초광역권 사업 발굴·구체화

【생활여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2.3→3.1조원

- (의료)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0.9→1.1조원)
 - (지역의료)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원), 신규 AI 기반 진료모델(142억 원),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확대(10→15억 원 비수도권)
 - (필수의료) 신규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용자(0.1조원), 취약지 보조금(191억 원)), 중증외상센터 핵심권역(2개)에 대한 치료 인프라 대폭 강화(109억 원) 등
- (교통·도시)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 *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3개소(545억 원), 조류탐지레이더 6개소(307억 원) 등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착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뒷받침(395→1,196억 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립대병원 시설·운영	1,908	2,459	· 시설장비 0.2조원, AI 진료모델 142억 원
- 지방의료원 시설·운영	1,783	1,815	· 시설장비 0.1조원, 운영비 621억 원
-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	1,191	· 용자 0.1조원, 취약지 보조금 191억 원
- 세종의사당·집무실	395	1,196	· 대상 부지 매입비, 설계비 반영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0.1→11.5조원

-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0.2조원)

-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국토대청소* 사업 추진(0.1조원)

* 생활·영농쓰레기 수거(분기별 4천만원) 및 댐쓰레기·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 (소득안정) 수입안정보험, 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소득망 확충

- (수입보험) 평년 수입 일정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9→14개)

- (수급안정) 신규 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 대상 신규 직불금 지원(2만ha, 0.1조원), 민간 RPC 벼 매입자금 확대(1.3→1.4조원), 신규 김 계약재배 응자 신설(408억원)

- (소비촉진)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원)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450→540만명, 201→240개교)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5.4만명)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 지급(169억원)

- (경쟁력 강화) AI·데이터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체질 개선

- (민간 확산) 신규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807억원), 신규 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1,400농가)

- (기술개발) 신규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84억원), 신규 AI기반 작물 생육 진단(78억원) 등

- (자금) 신규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0.1조원)

-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76→135개소) 및 신규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825개소) 등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	1,703	· 6개 군(공모)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 전략작물직불	2,440	4,196	· 수급조절용벼 등 신규 품목 도입
- 수입안정보험	2,078	2,752	·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 본사업 도입
- 신규 초등과일간식	-	169	· 초등 1,2학년 과일 간식 주1회 지원
-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	79	· 월 4만원 상당 식사비 보조 시범사업

② 저출생 · 고령화 대응

62.6→70.4조원

【 저출생 반등 】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 32.8→35.8조원

- (육아)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① (지급연령) 만 7→8세 이하로 +1세 확대

② (지원금)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특별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 → 최대 12~13만원)

- 다자녀·장애인가구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3.5만명 확대(중위 80→100%)
- 독감(13→14세 이하)·HPV(12세 남성 추가) 등 무료예방접종 확대

- (돌봄) 아이돌봄 지원확대(중위 200→250%), 사각지대 보완

• (취약계층)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 960→1,080h/연 확대
인구감소지역 신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사각지대) 심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신규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일 신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
개편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 (교육여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4~5세), 신규 0세반 교사비율 개선(1:3→1:2)

• (사각지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신규 오전 08시 이전 틈새돌봄 지원(365억원)

- (일가정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상한 220→250만원)으로
근로자 지원,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로 사업주 부담 경감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130~영세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20→40~영세 60만원

- (주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3.1만호),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육아친화플랫폼 10개소 조성(76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아동수당	19,588	24,822	· 지급대상 7세 → 8세 이하 확대
- 아이돌봄	4,750	6,003	· 중위소득 200→250%, 돌봄시간 확대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비 1,289)	4,703	· 지급대상 5세 → 4-5세로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5	40,728	· 육아기근로지원금 220→250만원 상향

【 미래세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

4.2→7.1조원

- (자산형성) 신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
 - *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 납입금(50만원 한도)의 6/12%를 매칭
- (일자리) 신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인구감소지역 우대) 및 구직촉진수당 상향(50→60만원)
 - * (비수도권)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
- (주거) 저소득 청년에 월세 지원(월 20만원, 24개월)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2.7→3.5만호)하여 주거안정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 청년미래적금	-	7,446	· 월 납입한도 50만원 정부 매칭 6/1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	9,080	·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894억원)
- 청년월세지원	777	1,300	· 신규 6만명, 계속 12.7만명 지원

【 고령화 대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25.6→27.5조원

- (돌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지원(71→777억원)
 - *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 사업비(4~10억원^{국비+지방비}) 차등 지원
- (소득)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및 비수도권 월 10만원 추가지원
- (재산관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750명 목표)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71	777	·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노인일자리	21,847	23,851	· 노인일자리 110→115만개 확대
- 고령자통합장려금	-	107	·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계속고용시)
- 기초연금	218,146	233,627	· 기초연금 월 34.3→34.9만원 인상

【 주요 청년지원 예산 】

사업명	지원 내용	'26예산안 (억원)
①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약계층(1유형) 구직촉진수당 확대 (50→60만원), 지원대상 확대 (1유형 +2.7만명, 2유형 +1.8만명)	10,12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취업청년 (중소기업) 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2년간 480~720만원) 등	9,080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과정 확대 (60→100개), AI·딥테크 특화과정 신설 (+200개)	1,025
신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	300
② 주거·자산형성		
신규 청년미래적금	· 연 6,000만원 이하, 중위 200% 이하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납입금의 6/12% 매칭지원)	7,446
청년 공공임대	· 청년 공공임대 확대 (2.7→3.5만호, +0.8만호)	42,831
청년 월세지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월세지원 상시화	1,300
③ 교육(직업훈련 포함)		
신규 Top-tier(탑티어) AI 융복합 과정	· 선도기업 및 우수대학이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 과정 신설 (+1만명)	1,338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대학·기업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학부 대상 단기집중 교육과정 대폭 확대 * (AI) 신규 40개, (로봇) 신규 2개, (미래차) 2→4개	1,342
신규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	· 학부-대학원-박사후 국내 정착까지 체계적 성장트랙 제공 (학부 2~4학년 400명, 연 2천만원)	85
④ 복지·기타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대상 아침밥 제공 확대 (450→540만식)	111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대상 대상 확대 (1,000→2,000명)	50
신규 경계선지능청년 일자리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200명 대상 기초소양·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참여수당 20만원 지급)	3

【 저소득층 】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 21.0→23.1조원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원 초과(195.1→207.8만원)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신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200개소) 등 의료급여 대폭 확대(8.7→9.8조원)
 -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주거·교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7~11% 상향(+1.7~3.9만원/월), 고교생 12% 인상(+9.2만원) 등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 (초등생) 연 48.7→50.2만원, (중학생) 연 67.9→69.9만원, (고교생) 연 76.8→86.0만원
- (**바우처**) 농식품바우처(1인 가구 월 4만원) 대상에 청년 가구 포함*
 - *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 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2만 가구)하고, 미사용·저사용 가구에 신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73.6만명)의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월 최대 3.8만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203,802	224,146	·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6.51%) 인상
· 생계급여	84,900	91,727	· 195.1→207.8만원(4인 가구)
· 의료급여	86,882	98,400	· 부양비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 주거급여	30,368	32,309	· 기준임대로 4.7~11% 상향
· 교육급여	1,652	1,711	· 교육활동비 평균 6% 인상
- 농식품바우처	381	740	·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 대상 추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824	· 73.6만명, 최대 3.8만원/월(12개월) 지원

* '25년 국민연금 납부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예산 519억원

【장애인】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확대”

6.8→**7.4조원**

-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2,222→2,848억 원)
 -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3배 상향(월 5→15만원)하고, 지원 단가 인상(일반지원의 150→170%)
 -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신규장애인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17개소, 59억원)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1,080→1,200시간)
 - 발달장애인·장애인아 가족 휴식프로그램 확대(1.5→1.9만명)
 - (소득)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확충(3.4→3.6만개)하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인상(월 10→13만원)하여 소득기반 확보
 -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한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확대(3→5개소)
- * 예: (기존) A4용지 등 → (개선) 운동매트,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등

【한부모】 “한부모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58→**0.6조원**

- (양육비) 한부모 양육비(월 23만원)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65% 확대하여 1만명(25→26만명) 추가 지원(+194억 원)
 -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 확대(월 5→10만원)
- (돌봄) 미혼모·부, 조손가정에 출산·양육 등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소 추가(+6억 원)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 인상(월 5→10만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장애인 활동지원	25,323	28,102	· 지원인원(13.3→14.0만명)
-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10	· 주간활동서비스 인원(1.2→1.5만명)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5→15만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5,528	5,722	· 중위소득 63→65% 이하

【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7→0.8조원

- (위기가구)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단전·연체 등 정보와 AI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
 - (생필품) 최초 방문시 기본 생필품(2~3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시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하는 신규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신설(130개소)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053억원)
 - (사각지대) AI 기반 위기가구 선제발굴 시범사업(AI콜을 통해 고위험가구 선별)
- (청년·청소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대상 확대(4→8개 시도)
 - 가정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신규 사전훈련(3개소)을 신규 지원하고, 인문·문화 등 신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1,020팀)
- (여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일센터 신규 지역주도형 직업훈련 신설(99억원),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규 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보급
 - 신규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7억원)

【 심리안정 】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수준 확대” 0.2→0.22조원

- (자살위험군)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현행)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개편) 소득요건 폐지
 -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81억원)하고, 신규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신설
 - * 상담, 상속·시체검안 등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등 경제 지원
- (트라우마) 산불 등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58억원) 뒷받침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 생필품 보장코너	-	50	·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 긴급복지	3,501	4,053	· 생계지원 대상 33.1→37.5만건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562	708	· 고위험군 치료비·사후관리 강화 등

4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7.6→**26.2조원**

【 민생회복 】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17.1→**23.7조원**

- (**서민금융**)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햅살론 6조원 공급,
상품구조 개편* 및 취급창구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 * 기존 5개 상품(5.95조원) → 햅살론 일반/특례/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6조원)
 - ** (기준) 은행저축은행별 취급상품 상이 → (개편) 취급은행 확대 및 모든 상품 제공
- (**교통비**)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 * 지하철·버스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5만원, (일반) 6.2만원
GTx·광역버스 포함시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9만원, (일반) 10만원
 - 기존 K-패스 환급지원도 어르신 대상 환급률 상향
 - * 일반 20%, 청년 30%, 3자녀 50%, 저소득층 53%, 어르신 20→30%
- (**주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30년까지 110만호 공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햅살론 특례·유스	3,424	4,500	· 서민금융 공급규모 5.95→6.0조원
- 대중교통비 환급	2,375	5274	· 정액패스 신설(일반 6.2 청년등 5.5만원)
- 공적주택 사업군	165,170	227,701	· 공적주택 공급 18.1→19.4만호

【 소상공인 】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0.4→**2.3조원**

- (**경영안정**) 연매출 1.04억 미만 소상공인(230만개사)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0.6조원)
- (**매출신장**)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 상향*(1.15조원)
 - *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 발행(0.4조원)

- (경쟁력 강화) 민관협업으로 지역상권을 혁신하고, 신규 수출지원·AI교육 신설 및 온라인 진출지원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 (지역상권)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최대 50억원 지원
 - (수출) 신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대상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지원
 - (디지털화) 신규 AI 교육·컨설팅·상품화 지원(0.2만개),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확대(0.3→0.4만개)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경영안정바우처	(추경 15,660)	5,790	· 25만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추경 10,000)	11,500	· 24조원 발행지원 + 국비지원율 상향
- 온누리상품권	3,907	4,580	· 디지털 4.5조원 + 지류 1.0조원 발행
- 경쟁력 강화 사업군	150	419	· 수출·AI·온라인 3종 경쟁력 강화지원

【 사회연대경제 】 “마을기업 · 협동조합 성장자금” 0.1→0.2조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취약계층 고용, 판로개척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지자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신규 도입
 - (창업) 신규 사회적기업 창업희망 500팀 대상 창업자금 제공(300억원)
 - (채용) 신규 취약계층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최대 3년간 월 50~90만원) 지원(321억원)
 - (협업) 신규 사회적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매칭 등 지역 문제해결 지원(137억원)
- (성장지원) 우수 협동조합(60개사) 대상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신규 마을기업 대상 성장자금 지원(130개사)
 - (협동조합) 신규 경제성 있는 유망조합(도약단계 30개) → 진단·교육·컨설팅 지원
신규 수익 발생하고 있는 우수조합(고도화 단계 30개) → 사업화자금 지원 등(31억원)
 - (마을기업) 신규 지정 130개사 대상 5천만원 성장자금 지원 등(53억원)
- (공정경제)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대폭 증원하고, AI 활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신규 소비자 피해 방지(2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사회적기업 지원	284	1,180	·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 마을기업 육성사업	17	53	· 마을기업 130개선발, 사업화자금 지원

5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6.0→17.6조원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 · 안전인력 투자 강화” 1.3→1.5조원

- (예방투자 확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1.1→1.7만개소)
 - *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을 확대하고, 신규지자체 협업 프로그램* 신설 등 전방위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10개 지자체 선정(공모) → 산재예방 프로그램 운영
- (안전점검 강화) 신규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하여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신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일터 안전 인식확산 기여
 -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50만원), 산재 은폐 등(500만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8	5,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사업장 등 시설지원(1.7만 개소) 등- (50인 미만등, 보조 최대 80%) 11,865개소- (10인 미만등, 보조 최대 90%) 5,593개소
- 산재예방시설 융자	4,588	5,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자지원 물량 확대(2,600→3,054개소)
- 안전보건 컨설팅	637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물량 확대(3.35→3.5만개소)
- 신규안전한 일터지킴이	-	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터 지킴이 1천명(직접 800+위촉 200명)
- 신규신고 포상금	-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위반(50만원), 고의적 법 위반(500만원)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2.8조원

- (취약노동자 보호)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3→6개월)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 강화(+0.2조원)
 - 신규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확충**(+2개소) 등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
 - *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 장려금 지급
 -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상담, 한국어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 수행

- (근로복지 증진) 중소기업 대상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 지원 및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촉진

- (도입장려금) 신규 주 4.5일제 도입사업장에 월 20~50만원 장려금 지급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시 60~80만원 장려금 지급
- (기반확보) 신규 육아기 10시출근제(0.2만명), 일터혁신상생컨설팅(200개소 추가)

- (근로감독 강화) 근로·산업안전감독관 증원(+2천명),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체불임금 대지급	5,293	7,465	·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도산시 최대 6개월)
- 장애인 근로지원인	2,470	2,659	· 근로지원인 확대(11,000→11,500명)
- 신규 워라밸+4.5 프로젝트	-	277	·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257억원) ·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20억원)
- 신규 육아기 10시출근제	-	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100% 보전 사업주 지원(월 30만원, 0.2만명)
-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172	1,126	· 신규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 고용안전망 】 “구직촉진수당 50→60만원” 12.4→13.3조원

- (구직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확대(30.5→35.0만명)하고,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60만원)으로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
 - 은퇴계층 대상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도입(0.1만명)
 - *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계층이 구인난 업종 취업시 최대 360만원 지급
- (실업자 보호) 구직급여(161.1→163.5만명)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확대(0.3→0.4만명)를 통해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0,129	· 구직촉진수당 월 50→60만원 등
- 구직급여	109,171	115,376	· 지급단가 +2.9%, 지원인원 확대 등
-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18	· 은퇴 중장년 연 0.1만명 대상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 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지방 성장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4조원	0.9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	월 15만원 (6개 군, 시범)
	직장인 든든한 한끼	–	5.4만명
저출생·고령화	아동수당	(연령) 7세 이하 (금액) 월 10만원	(연령) 8세 이하 (금액) 비수도권 최대 3만원 추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5세	4~5세
	청년미래적금	–	납입금의 6/12%
사회안전 매트	생계급여(4인가구)	월 195.1만원	월 207.8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12개(시범사업)	전국 확대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보장 코너	–	130개소
민생경제	대중교통 정액패스	–	일반 월 6.2만원 청년·노인 월 5.5만원
	공적주택 공급	18.1만호	19.4만호
	지역사랑상품권	– (추경 1.0조원)	1.15조원 (24조원 발행 지원)
노동	산업재해 안전장비 지원	1.1만개 사업장 (보조율 최대 80%)	1.7만개 사업장 (보조율 최대 90%)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3개월	6개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월 60만원

3 국민안전, 국의 중심의 외교·안보

①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원

- (예측)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27억원)을 개발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 확대(+40개소)
-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원)

- (예방·대응) 호우·산불·싱크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호우) 재해위험지역 정비(0.9→1.1조원), 지능형 CCTV 국가하천全구간 설치(+1,000개소),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신규 맨홀 추락방지시설(21만개) 설치 지원
- (산불·화재)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120대, '29년 목표 조기달성), 신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456개소), 신규 중용량포 방사시스템(4대), 신규 화재 연기감지기(50만 세대)
- (싱크홀) 노후하수관로 개량(0.3조원),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 구입(+19대)

-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을 인상(월 7→8만원)하고,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신규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각 월 5만원)

- (복구·관리) 재난 현장에 신규 원스톱 피해자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신규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 조성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95	215	· 수위관측소 신규 40개소 신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	10,546	· 풍수해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41개소
- 하수관로 정비	3,471	3,652	· 침수우려지역 92개소 보수·정비 등
- 신규 피해자 통합지원	-	2	· 재난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신규 국민안전펀드	-	100	· 민간자본 포함하여, 총 200억원 조성
- 재해·재난대책비	9,270	20,093	· 피해지원 항목 확대 및 기준 상향

【 민생범죄 】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원

- (수사지원)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 (AI기반) 신규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원), CCTV 영상분석(28억원) AI를 활용한 신규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원)
- (인력·장비) 신임경찰 충원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권총(7,746정), 차세대 외근조끼(7,765벌) 보급, 무도실무관 바디캠 확충 등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 (생활범죄) 법무부-경찰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강화, 신규 경찰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9억원),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확인(찐센터) 보강(9억원)

- (피해자보호)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경상피해자 대상 신규 긴급생활안정비 도입

* 자녀·손자 사망시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 보장 등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 야간·주말 운영 확대

- (권리구제)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을 증원(254→274명)

- 회생법원 추가 신설(3→6개소) 및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빠른 재기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AI기반 수사역량강화	15	88	· SNS마약채널(7억원), CCTV분석(28억원), 정신질환행동분석(21억원) 등
-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433	729	· 신임경찰 충원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차세대 외근조끼 보급 등
- 생활범죄 근절	372	587	· 법무부 경찰청 스토킹 112시스템 연계 등
- 피해자 보호	224	310	· 범죄피해구조금 개편,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운영 야간주말 확대 등
- 권리구제	1,000	1,387	· 국선변호인 증원, 회생법원 추가신설 등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원

- (간부)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 (보수) 5년미만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 대상 최대 6.6% 수준 보수 인상(3.5%+3.1%)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 확대(민간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
- (신규내일준비적금) 장기복무자(장기전환 포함) 대상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

- 당직비(평일 2→3만원 / 휴일 4→6만원),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활동비(월 30→35만원)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 (장병)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단가를 인상(1.3→1.4만원/일)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4회+자율 증·특식)하여 급식의 질 제고
 -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되었던 신형 전투피복을 전부대로 확대(0.1조원)하고, 구형 전투차량을 신형으로 본격 교체(211→729대)
 -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3→4만명)·신규e북 지원을 확대하고, 전장병 AI(409억원)·드론(190억원) 교육 등 인프라 조성

- (예비군) 동원훈련비 및 도시락비 인상*, 신규기본·작계훈련비를 신설(1만원)하여 예비군 훈련 보상 확대

* (동원 I) 8.2→9.5만원, (동원II) 4→5만원, (도시락비) 8→9천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간부확보장려사업	934	1,668	· 신규장기복무자 적금,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등
- 부대운영지원	2,202	2,660	· 당직비,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
- 기본급식	16,844	18,057	· 급식단가 인상,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
- 일반훈련	739	968	· 기본·작계훈련비 신설, 도시락비 인상 등

【 전력증강 】 “전투기 · 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1.8→3.2조원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신규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포함, 1.3→2.4조원)을 차질없이 지원
 -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스텔스 브릿지, 구조·소재·센서 3대기능) 착수(신규 636억원)
- (첨단무기)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착수(신규 418억원)
- (K-방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 강국 발판 마련(0.3→0.5조)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12,533	24,284	· 보라매 양산·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
- AI·드론·로봇 등	4,612	7,608	·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 K-방산 육성	3,326	4,728	· 방산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수출지원 등

【 보훈 】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4.3→4.5조원

- (보훈급여)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45→48만원), 무공영예수당(51~53→54~56만원) 등 +3만원 정액 인상
 - 신규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고, 부양 가족수당을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의료지원) 보훈위탁병원을 확대(연 +200개, '30년까지 2천개)하고, 신규 준보훈병원*을 새로 도입하여 보훈의료 사각지대 축소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보훈급여군 사업	50,816	51,998	· 보상금·수당 단가 인상, 지원대상 확대 등
- 보훈·위탁병원 진료	6,414	7,200	· 위탁병원 확대, 준보훈병원 도입 등

③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7.4→6.4조원

【 실용외교 】 “국익 연계 ODA로 개편” 6.6→5.4조원

- (ODA)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 정상화
 - * 인도적지원 : ('23) 2,994 → ('24) 7,401 → ('25) 6,775 → ('26안) 3,315억원
재량분담금 : ('23) 2,767 → ('24) 3,016 → ('25) 3,833 → ('26안) 2,807억원
 -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신규개도국 기술인재 양성 지원(68억원),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1.4→1.6조원)은 확대
 - (실용외교) 새정부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77억원)를 지원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 * 현지 수요에 맞는 문화·학술 교류 및 외교정책 홍보 추진(225→256억원)
 - (재외동포) 신규해외 동포청년 400명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유도
 - * (학업지원, 150명) 등록금 50%, 어학연수, 학업장려금 등
(취업지원, 250명) 직업교육 훈련비(60만원/인), 자격증 취득비, 정착금 등

【 한반도 평화 】 “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확대” 0.8→1.0조원

- (남북협력) 민생·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0.8→1.0조)
- (사회적대화) 신규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운영(25억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상담센터 1→2개소)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ODA	65,835	53,573	·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 공공외교 등	304	332	· 지역전략, 국제행사, 공공외교 지원
-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	31	· 신규학업지원 150명, 취업지원 250명
- 남북협력기금	7,981	10,003	·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재해 대응	재해위험지역 정비	0.9조원	1.1조원
	신규 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	50만 세대 (노후아파트)
	신규 맨홀 추락방지시설	–	21만개소 (모든 상습침수지역)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	256대	376대 ('29년 목표 조기 달성)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7만원/월	8만원/월
민생범죄	국가하천 지능형 CCTV	–	+1,000개소 (전구간 도입)
	신임경찰 총원	4,800명	6,400명
	긴급생활안정비	–	300만원 수준
국방·통일	회생법원	3개소	6개소
	신규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	1,080만원 (3년간)
	당직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군 급식단가	1.3만원/일	1.4만원/일
	장병 AI 교육	3만명	47만명 (전 장병)
	신규 참전유공배우자 생계지원금	–	1.7만명 (월10만원)
	남북협력기금	0.8조원	1.0조원

-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 2. 교육 분야**
-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4. 환경 분야**
- 5. R&D 분야**
-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 7. SOC 분야**
- 8.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 9. 국방 분야**
- 10. 외교 · 통일 분야**
-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 ◇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 및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 ◇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망 구축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51%)으로 최대 급여액을 200만 원(월 195.1→207.8만 원, 4인) 이상으로 확대, 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충*
 - * 근로·사업 소득공제: (연령) 만29세→34세 이하, (지원) 40만 원+30%→60만 원+30%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및 신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저소득층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3.8만 원, 74만 명)
- 신규 전국민 생필품 기본보장 코너*, 신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 (1차 방문) 생필품 무료 제공(2~3만 원 한도) → (2차) 대상자 확인 후 상담·사례관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2→1.5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수당(월 5→15만 원) 등 돌봄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3.4→3.6만 개)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중위 63→65%) 및 조손가족 등 추가양육비 인상(5→1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확대(4→8개 시도)

□ 양육부담, 돌봄, 일·가정양립, 주거 등 저출생 반등 투자 확대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만 7→8세 이하), 지역별 10~13만 원 차등 지원*
 - *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11(우대지역)~12만 원(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12~13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중위 200→250%) 및 사각지대 보완*
 -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야간긴급돌봄 수당 5,000 원/일 신설,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 960→1,080h/년 확대 등

□ 어르신 돌봄, 소득보장, 고령산업 육성 등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71→777억원), 노인일자리 지자체 주도 전환 및 확대(110→115만개)
- 신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50명 목표)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속적 투자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24년 0.6조원 → '25년 0.8조원(완료사업 제외) → '26년 1.1조원

-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개선, 운영 지원 확대
 - * 국립대병원 : 신규 24시간 진료체계 지원(126억원) / 취약지 지방의료원 : 現 10→改 15억원 비수도권
- 신규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저리융자+보조금'* (0.1조원) 지원을 신설하고, 중증외상센터 2개소 최중증 치료역량 대폭 확대(109억원)
 - * 응급의료기관 융자(1,000억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191억원)
- 선진국 수준의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의사·시니어의사·진료간호사(PA) 지원 예산 확대(0.2조원)
 - * 수련환경 평가·인증체계 구축 82억원,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954억원

(단위: 억 원)

	'25년	'26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218,616	239,868	▪ 생계급여(84,900→91,727), 주거급여(30,368→32,309)
▪ 취약계층지원	58,322	64,724	▪ 장애인 활동지원(25,323→28,102)
▪ 공적연금	883,794	969,925	▪ 국민연금급여지급(484,133→545,085)
▪ 보훈	65,375	67,459	▪ 보상금(35,628→37,175), 보훈병원진료(3,923→4,505)
▪ 주택	355,911	383,937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0,444→63,788)
▪ 사회복지일반	10,820	12,098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1,709→1,793)
▪ 아동·보육	52,304	61,149	▪ 아동수당(19,588→24,822)
▪ 노인	274,413	293,161	▪ 기초연금(218,146→233,627)
▪ 여성·가족·청소년	17,383	19,462	▪ 아이돌봄지원(4,750→6,003)
▪ 고용	235,801	249,402	▪ 모성보호육아지원(40,225→40,728)
▪ 노동	111,048	118,683	▪ 산재보험급여(80,043→81,463)
▪ 고용노동일반	6,899	8,255	▪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89→96)
▪ 보건의료	47,958	51,977	▪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629→1,765)
▪ 건강보험	141,277	143,161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126,093→127,171)
▪ 식품의약품안전	7,544	8,149	▪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286→346)
합 계	2,487,466	2,691,411	전년대비 +8.2%

〈참고〉 일자리 분야

-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고, 산재·체불 등 취약근로자 권익을 두텁게 지원

□ 세대·지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중장년층 구인난 업종 취업 인센티브 신설(최대 360만원, 1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0→10.5만명, +1,308억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제공
- 노인일자리를 110→115만개까지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초광역, 광역-기초 등 지역연계 강화 및 지역 고용현안 대응을 위한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신설
* [신규](#)광역이음프로젝트(초광역 3개소, 300억원), [신규](#)기초이음프로젝트(광역-기초, 기초간 등 10개소, 200억원), [신규](#)고용이음프로젝트(4개소, 200억원)

□ 직업훈련 재구조화를 통한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강화

- 청년 등 대상 AI 특화훈련 신설 및 중소기업 AI 전환 촉진을 위한 재직자 AI 과정·AX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투자
* [신규](#)내일배움카드 Top-tier AI 융복합 과정(1만명, 1,338억원)
[신규](#)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고급3만명, 173억원 / 기초10만명, 135억원)
[신규](#)민간능력개발주치의(2천개소, 29억원), [신규](#)중소기업 AX 전환 지원(600개소, 47억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内 AI·딥테크 특화과정 신설(+200개), 글로벌 과정 확대(60→100개) 등 청년 창업지원 확대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부과 및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 교육생 훈련 완수 유도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4.5일제 도입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대체인력지원 단가 인상 등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10시간단축) 220→250만원, (주10시간초과) 150→160만원

- 주4.5일제 도입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및 문화 확산 유도

* 신규 주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도입 20, 전면도입 40만원), 신규 주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 신규 육아기 10시출근제(30만원), 일터혁신상생컨설팅

□ 임금체불·장애인·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현행) 최종 3개월 임금 → (개선) 최종 6개월 임금 (도산사업장 대상 확대, +0.2조원)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 장려금 지급

□ 취약계층 구직지원, 실업자 보호 등 고용안전망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확대(30.5→35.0만명)하고, 구직촉진 수당 인상(월 50→60만원)으로 저소득층·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 구직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 보호체계 강화

* 구직급여(161.1→163.5만명), 자영업자 실업급여(0.3→0.4만명)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직접일자리	36,824	38,265	▪ 노인일자리(110→115만명)
▪ 직업훈련	22,628	22,365	▪ Top-Tier AI 과정(1만명) 신설
▪ 고용서비스	17,120	19,016	▪ 국민취업지원제도(30.5→35만명, 구축수당 인상)
▪ 고용장려금	57,046	59,17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 창업지원	28,762	30,203	▪ 창업성장기술개발(4,777→6,684억원)
▪ 실업소득 유지·지원	130,954	140,504	▪ 구직급여(161→164만명), 대지급금(<small>도산사업장 3→6개월</small>)
▪ 지원고용 및 재활	10,754	11,585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합 계	304,089	321,114	전년대비 +5.6%

- ◇ 지역전략산업 연계 거점국립대 육성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 강화
- ◇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의 성장 전폭 지원
- ◇ 영유아(0~5세) 교육·보육 지원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 ◇ 직업계고 취·학업 연계 및 해외 한국 관련 교육 기반 강화

□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

-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신설영유아특별회계(60%) 및 교부금(40%)으로 배분
-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 '17~'30) :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보육비 지원
(개편) 신설영유아특별회계('26~'30) : 만 0~5세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비 지원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사립·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 체계 통한 동반성장 추진

- 거점국립대별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26년 3개교 → 단계적 확대)
 - *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교당 400억원), 신규 AI 지역거점대학(교당 100억원) 등
 - 과기원·출연연·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 간 연구·교육 협력, 장비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혁신 및 협력 시너지 창출
 - * 신규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인센티브(9교 1,200억원), 고가연구기자재(9교 486억원) 등

- 사립·전문대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RISE 지원규모 확대 및 재구조화**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강화

* 대학혁신지원(신규 특성화인센티브) 85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신규 특성화인센티브) 340억원

** ('25) 2.0 → 2.1조원(8개 사업 추가 통합)

- AI 등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성장지원 강화
- 첨단분야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 수요에 맞추어 혁신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부터 전공 과정까지 지원 분야 및 투자 확대
 - * 지원분야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 AI·로봇까지 확대
예산 : <부트캠프> 660(44개) → 1,342억원(88개) / <특성화대학> 1,167(28개) → 1,208억원(33개)
 -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연구 및 박사후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를 전폭 지원하여 핵심 인재의 전략적 육성 추진
 - * 신규 첨단분야 인턴십 41억원, 신규 글로벌 교육과정 8억원, 신규 학부연구생 32억원, 신규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학부 2~4학년 年 2천 ~ 박사후 年 6천) 85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개편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 * (기존) 3~5세 유특회계 3.1 + 0~2세 일반회계(보육) 5.3 → (개편) 0~5세 영유아특별회계 9.2조원(+9.3%)
 - 신규 '26년 만 4~5세 대상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및 신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신규 틈새돌봄 등 지원 확대(+0.8조원)
 - *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1:3 → 1:2 개선에 따른 추가교사 1.5만명 채용 지원
- 직업계고 취업·학업 연계 확대 및 해외 한국 관련 교육 기반 강화
-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채용연계형 실습과정 확대 (+33억원) 및 신규 직업계고-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 지원(50억원)
 - 재외 한국학교 지원 강화(828→921억원) 및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보급 확대(193→213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영유아·초중등교육	813,807	820,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강화(+8,331) - 만 4~5세 무상교육·보육(4,703),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3,237), 틈새돌봄 지원(365) 등
▪ 고등교육	157,600	162,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 육성사업(4,243→8,736)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20,010→21,403)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1,827→2,625)
▪ 평생·직업교육	11,588	13,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828→935)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124→189)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3→75)
▪ 교육일반	1,638	1,658	·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76→94)
합 계	984,633	998,274	전년대비 +1.4%
교부금 제외 합계	261,839	281,532	전년대비 +7.5%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 K-컬처 확산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문화향유·격차해소
- ◇ K-붐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육 기반 강화
- ◇ 국가유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전국민 향유기회 확대

- 콘텐츠 수출 확대, 문학·뮤지컬 등 순수예술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수출 통합·거점화
 - 수출특화 펀드 중심 정책금융(0.3→0.5조원), 장르별 특화지원*, 맞춤형 인재양성, AI 활용지원 등을 통한 콘텐츠 수출 확대
 - * OTT 특화 장편 드라마 제작지원(8→12편), 중예산영화 제작지원(9→18편)
 - 제2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발굴을 위한 순수예술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K-컬처 허브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K-컬처 확산 지원
 - K-pop 공연장 개보수(2개소, 각 20억원), K-pop 체험존 리모델링, 중소 음악기획사 해외진출 지원(30억원) 등 한류인프라 확충
- 문화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확산,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유도
 -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강화*,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순회 대폭 확대(공연·전시 400 → 1,200회)
 - * [통합] 단가인상(14→15만원) / [청년] 장르(영화 추가), 연령(19→19~20세) 등
- 편리한 국내관광 환경 조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국민의 지역관광 유인 제고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추진
 - AI 활용 개인 맞춤형 관광지·숙박·교통 등 안내시스템 도입, 외래객 대상 통합 관광패스* 신설을 통해 한국관광 매력도 제고
 - * 일정기간(예: 5일권) 동안 교통, 관광지 입장, 관광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반값여행', 65억원)* 시범실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6.5→10만명) 등 관광지원 강화
 - *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20만원 내에서 쓴돈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보장,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문화 확산
 - 어르신 건강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신설(100만명), 모든 지역에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확충*(신규 30개소)
 - * 신규 스마트형(VR-AR), 시니어형, 장애인형, 유아형 특화 체육시설
 -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 및 예비국가 대표 훈련 신규도입(5개 종목, 100여명)을 통한 성장 기회 확대
 - *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체크 신설(14억), 태릉선수촌 노후시설 개보수(신규 41억) 학생선수 체전 출전 단가인상 : 숙박비(4→6만), 식대(2→3만) 등
- 국가유산의 체계적·사전적 재난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민의 체험·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유산 가치 제고
 - 국가유산 모니터링·재난방재 시설 확충* 및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재난위험을 조기 포착하여 피해 예방
 - * 소방시설(442→470개소), CCTV(525→615개소), IoT(111→118개소) 등 설치 확대
 - 지역별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1.7→2.0만회), 안내판 전면 고도화('26년 2,400개)를 통한 국가유산 주변 정비
 - * (예) 향교·서원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고택·종갓집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문화예술	39,857	45,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펀드(150→650) 중심 정책금융 확대 • 공연장 개보수(2개 x 20억원), K-pop 체험존 •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단가인상(14→15만원) • 신규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75)
▪ 체육	16,739	16,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릉선수촌 노후시설 개보수(41) • 신규 예비국가대표 훈련지원(31)
▪ 관광	13,477	14,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65) • 신규 외래관광객 통합 관광패스(28)
▪ 국가유산	13,874	1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100→149)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176→211)
▪ 문화예술일반	3,941	4,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101 → 153)
합계	87,888	95,600	전년대비 +8.8%

- ◇ 녹색금융,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보조 등 탈탄소 전환 적극 지원
- ◇ 무공해차 보급확대, 녹색실천 지원 등 탄소중립 생활기반 강화
- ◇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예방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지원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

○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공급 확대*

* (펀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456→592억원), (용자) 미래환경산업융자(3,333→4,253억원), (이차보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540→665억원), (출자) 산업은행 녹색금융(500→900억원)

○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와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강화*

* 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1,350억원, +25.1%), 비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296억원, +111.8%)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모든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신재생에너지, ESS 구축 등 지원

*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25년 전체 24개소 중 15개소 지원 중
→ '26년 전국의 모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신규 9개소)

□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촉진 및 충전 인프라 내실화

○ 그간 축소해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300만원으로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추가100만원) 신설, 전체 보조금 예산도 확대(²⁵1.5→²⁶1.6조원)

*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①무공해차 인프라펀드, ②무공해차 구매용자, ③무공해차 안심보험 등 '금융지원 3종패키지'를 신설(+1,500억)하여 튼튼한 보급 기반 마련

①펀드(740억):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사용자 수요 반영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②용자(737억): 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저리융자

③보험(20억): 전기차 화재로 타인 손해야기 시 보험금 지급

□ 자원의 순환이용과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지원 확대

- 신규 CE100 프로젝트(10억원), 신규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23억원), 신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10억원) 등 자원순환 촉진 지원*

* CE100(Circular Economy 100) :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일반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25년 159억원(180만명) → '26년 181억원(220만명) +40만명

□ 빈번한 수해로부터 국민 보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국립공원 산불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 환경 안전 강화

- 홍수 및 싱크홀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확대(7,706억원)

- 전국 모든 상습침수지역(21만개, 서울시는 자체추진)에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신규 지원(1,104억원)

- 국가하천 全구간 설치된 CCTV에 AI기능을 탑재하고(+1,000개소), 정수장 위험지역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로봇 도입(13억원)

- 전국 국립공원 내 신규 IoT 산불감지기(36억원) 설치, 산불진화 중형헬기 교체 및 대형헬기 도입소요* 확대

* 중형헬기(^{25추경}74→99억원), 대형헬기(^{25추경}110→165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자원순환·환경경제	17,364	18,857	•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3,333→4,253) • 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체계구축운영(87→260)
▪ 기후대기·환경안전	43,612	43,114	• 무공해차 보급사업(22,631→22,825)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9,284→9,309)
▪ 물환경	51,223	57,986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6,759→7,706)
▪ 자연환경	8,118	8,969	•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10→32)
▪ 환경일반	5,671	6,330	• 신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500)
▪ 해양환경	3,729	4,505	• 연안정비(872→1,142)
합 계	129,717	139,760	전년대비 +7.7%

- ◇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
- ◇ 출연연은 국가 임무중심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
- ◇ 첨단인재 양성-유치-유출방지 3대 프로젝트 추진

-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 A(인공지능), B(바이오), C(문화콘텐츠), D(방사), E(에너지), F(첨단제조)

- AI는 4극 3특 체제 기반의 지역 주도 피지컬 AI 5대 선도 사업* 집중 육성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

* 대구(로봇), 광주(자동차·에너지), 부울경(제조·조선), 충청(가전), 전북(팩토리)

-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실증,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에 집중 투자

-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 수주하던 출연연 PBS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0.5조원)

* (기존) 2~3억원, 1,877개 과제 → (개편) 90~450억원, 100개 과제

- 각 기관의 기술개발 목표를 온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

- 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0.7 → 1.3조원)

- TIPS 사업은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업(846→1,240개) 대폭 확대

* 일반 TIPS(5→8억원), 스케일업 TIPS(12→30억원)

- 프로젝트 기반* 신규 R&D 사업화 보증 신설(25년 0.3조원, 5년간 10조원)

* (현재) 기술력+매출액, 기업단위 대출 → (개선) 기술력+성장성, 프로젝트 대출

□ 지방 및 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 보장을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 신설**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1.2 → 1.5만개)

* 1억원 미만(0.5~0.8억원)의 소액 과제 2천개 복원 등

□ 첨단인력 확충 3대 프로젝트 추진(0.9→1.4조원, 2.7 → 3.3만명)

- (^{양성}Core in Korea) 첨단 분야 인재양성 규모 확대*(2.7→3.1만명), 현장 기반 산학공동 연구 강화**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 핵심 신산업 교육과정 확대(0.2→0.3조원)

** 전략기술박사후연구원산학프로젝트 신설 등 4개 사업 신설(265억원)

- (^{유치}Brain to Korea) 세계 최고 수준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0.15조원, 640명)

* 5년간 1.2조원 투자를 통해 총 2,000명 해외인재 유치

** BP-BP⁺ 537억원,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 160억원, 세종펠로우십 복귀트랙 260억원 등

- (^{유출방지}Star in Korea) 집단·개인연구* 지원 확대 및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 방지(0.23조원, 약 1,300명)

* 4대 과기원·일반대학 InnoCORE 700명,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신규 7→20개) 등

**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확대(4.8→5.6만명), 박사우수장학금 신설(1,000명) 등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 고
▪ 과학기술·통신 분야	108,588	129,893	· 개인기초연구(22,657), 집단연구(4,706) · 바이오의료기술개발(4,34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1,806	88,211	· 소재부품기술개발(12,909) · 창업성장기술개발(7,864)
▪ 교육 분야	14,864	16,717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6,208) · 인문사회 기초연구(2,827)
▪ 보건·복지 분야	13,992	15,608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521) · 연구중심병원육성(947)
▪ 교통 및 물류 분야	9,892	11,308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611)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개발(307)
▪ 기타 부문	76,645	91,212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1,441)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1,068)
합 계	295,787	352,949	전년대비 +19.3%

- ◇ 첨단·주력산업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RE100 산단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촉진
- ◇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딥테크·혁신창업 생태계 확충
- ◇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쟁력 강화 및 시장·상권 혁신 지원

□ 첨단·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 신규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인프라 신규 조성(2개소), 신규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기반 확충 등 통해 국내 공급망 강화(59억원)
 - 조선·해양·항만·방산(동남권), 에너지·자율차·반도체(서남권), 첨단과학·산업(중부권) 등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
 - * 신규 K-조선 인재·혁신밸리(동남권, 62억원), 신규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서남권, 20억원), 신규 첨단소재 AX혁실플랫폼(중부권, 22억원) 등
- 韓·美 조선협력 확대 위한 신규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신규 MRO 역량강화, 신규 국내기업 美 진출 등 적극 뒷받침(193억원)
 - 신규 유통플랫폼과 소비재(K-뷰티 등)의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500억원)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자·보조를 대폭 확대(0.5→0.9조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용자·보증 강화(0.4→0.6조원)
 - 지원목적 달성*한 석탄, 석유 재정투자 축소(△1,379억원)
 - * (석탄) '25년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 (석유) 비축유 1억 배럴 달성 등
 - 원전 유망기업 육성 등 신규 원전 산업 고도화 지원(80억원) 및 신규 SMR 제조기술 확보(총사업비 0.3조) 등 원전 산업 지속 투자(0.9조원)
-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규 ESS 설치를 지원하여 AI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26년 0.1조원)
 - 「신규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통한 창업·실증 지원, 산단 등 신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0.1조원)
 -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 선제 구축 지원(250억원)

□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강화

- AI·딥테크 **신규 특화형 창업패키지(+175개)**, **신규 유니콘 브릿지 사업(50개사)**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100억원 이상 선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대상 특례보증 포함 최대 200억 지원
- 대기업·글로벌 기업과의 중소·벤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523→600개)하고,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 인프라도 확충
-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로 확대(1.0→2.0조원)하고, AI·딥테크 등 첨단분야 대상의 특례보증, 특화자금도 대폭 확충

□ 소상공인 재기지원·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시장·상권 혁신 지원

- 경영안정바우처* 신설(0.6조원), 점포철거비 인상(4→6백만원) 및 폐업자 전직·취업연계수당 확대(1.0→1.2만건) 등 재기지원 강화
 - * 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등 25만원 지원
- AI활용, 수출지원 및 온라인 진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 **신규 AI교육(114억원)**, **신규 수출육성(K-소상공인, 95억원)**, 온라인 TOPS(150→210억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4.5조원 발행(0.5조)
- 민간 역량을 활용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혁신 지원 및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10곳) 종합 패키지 육성 신설
 - * (상권) **신규 글로컬(6곳)**, 지역대표(10곳), **신규 골목형(50곳)**/ (시장) **신규 브랜드 전통시장(10곳)**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6,185	50,745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6,480), 에너지바우처(5,172)
▪ 산업혁신지원	68,172	81,623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1,350), 산단환경조성(4,073)
▪ 무역 및 투자유치	9,718	16,820	· KOTRA지원(3,401), 수출지원기반활용(1,811)
▪ 창업 및 벤처	39,505	45,274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1,000), 혁신창업사업화(16,358)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06,835	116,465	· 소상공인지원(융자)(33,620), 신성장기반자금(11,111)
▪ 지식재산일반	3,567	4,101	· 특허심사지원(726), 지식재산활용지원(367)
합 계	281,772	323,264	전년대비 +14.7%

- ◇ 철도·도로 확충 등 균형발전 견인 및 건설경기 진작 뒷받침
- ◇ 항공기 사고 대응, 싱크홀 탐지 등 노후 SOC 안전 투자
- ◇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등 국민 생활 부담 경감
- ◇ AI 시티, 스마트 건설 등 신산업 미래 혁신 SOC 강화

(균형)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을 위한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

- 국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공사를 적기 지원하고 (0.5→0.8조),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 구축도 적극 뒷받침
 -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25.7)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0.08→0.12조) 등 철도·도로 준공 지원을 통한 지역간 연결성 강화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350→956억),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거점 조성 등 지역 인프라 지원
 - * 부산 북항 재개발(0.11→0.14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79→532억원) 등

(안전) 교통 인프라 위험 예방·대응, 노후시설 보강 집중 투자

-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탐지 충돌 예방, **신규** 김포공항 관제탑 신축(23억, 총 480억원) 등 공항 안전 인프라 확보(0.1조)
- 수도권 광역철도 내 AI CCTV 확충(400→850대), 싱크홀 대비 지하탐사 지원(15→131억) 등 일상속 교통 위험 최소화
 - 철도 유지보수 대피 공간^{*} 보강(550→799억) 등 환경여건도 개선
 - * 유지보수 구간 교량·옹벽 등 개소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설비 설치
- 하천 재해대책비(0.2→0.4조), 극한 홍수·가뭄 대응 국가하천 정비(0.68→0.75조) 등 재해·재난 대비 안전 강화 투자

□ (생활) 교통비 부담 경감 등 국민 교통 이용 접근성 확대

- 버스·지하철 대중교통을 월 5~6만원 부담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정액 패스* 도입
 - * (지하철·버스) 청년·어르신·다자녀: 월 5.5만원, 일반: 월 6.2만원
(GTX·광역버스 포함시) 청년·어르신·다자녀: 월 9만원, 일반: 월 10만원
- 수도권 광역 교통 이동성 강화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확대(250→267개, +17개)
- 고령 운수사업 종사자의 신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2천건) 등 교통사고 안전 예방 강화

□ (신산업) 항공·건축·도시 부문내 AI 접목 등 SOC 혁신 강화

-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은 5대 분야*(소방·항공·농업·배송·건설) 중심으로 AI 드론 국산화(48→122억) 및 국내 활용 강화 추진
 - * (소방) 고중량(100kg 이상) 소화액 탑재가능 / (항공) 조류퇴치용 군집드론 등
- 3D 모델링(BIM), 공장 생산(OSC), 장비 자동화(MC), IoT 등 스마트 기술을 건설현장(6개)에 적용하여 안전성·생산성 제고
- AI 종합 실증이 가능한 AI 특화 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신규 사업기획 착수(40억), 우수 실증사례 확보 등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수주를 지원하는 PIS 펀드 조성(300억)

* '27년까지 총 1,100억원 조성 목표('25년 300억원, '26안 3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5년	'26안	비 고
▪ 도로부문	71,922	62,525	▪ 민자도로(9,799→2,758), 고속도로(10,445→9,941)
▪ 철도부문	70,016	88,411	▪ 광역철도(9,131→9,476), 도시철도건설(5,209→7,885)
▪ 항만수자원부문	13,533	13,464	▪ 하천재해대책비(2320→4,000), 국가하천정비(6,794→7,477)
▪ 지역 및 도시부문	19,860	22,383	▪ 세종의사당(350→956), 대통령집무실(45→240)
▪ 물류등기타	42,767	45,160	▪ 정액 패스(2,375→5,274), 준공영제(1,638→1,971)
▪ 항공·공항·산단	16,311	15,906	▪ 공항시설관리(3→1,177), 울릉도소형공항(254→1,149)
합 계	254,344	274,506	전년대비 +7.9%

- ◇ AI·데이터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의 미래 산업화
- ◇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으로 K-FOOD 생태계 확장
- ◇ 선제적 수급관리와 식비 지원으로 국민 필수 먹거리 확보
- ◇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살고싶은 농산어촌 구현

□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

- 농어업 AI 대전환을 위한 신규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조성, 신규 데이터기반 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1,400농가) 등 확산 기반 마련
 - * 신규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 조성(807억원), 신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1,400농가)
- 신규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 신규 AI 위성기반 작황 예측, 신규 중소농가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첨단 R&D·실증 확대
- 신규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신설(결성규모 1,000억원), 신규 스마트피셔리 전문교육·판로 등 창업·교육 및 자금 지원

□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FOOD 가치사슬 강화

-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APC·FPC 등 76개소→135개소) 및 신규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 직거래 소비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 * (유통) 스마트APC 확대(240억), 산지유통시설(FPC) 확충, 온도 결제정산자금 확대(600→1,000억)
 - (소비) 소비자유통시설(FDC) 착공, 수산물 직매장 확대(30→60개)
- 수출바우처·융자 지원 등 기업육성 패키지 지원 확대, 비관세·물류장벽 완화 및 新수출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
 - * (기업육성) 수출바우처 확대(726→1,095억원), 융자 확대(6,216→6,958억원)
 - (수출 활성화) 신규 복합 거점형 물류센터(1개소), 무역지원센터 확장(11→12개소)
- 수출 선도품목 중심으로 수출단지, 스마트장비 등 생산역량 확충 및 SNS, 한류스타 마케팅 등 인지도 제고

-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필수먹거리 식비 지원 확대
- 식량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 재배면적 확대, 단가 인상, 신규 품목(수급조절용벼 등) 추가($2,440 \rightarrow 4,196$ 억원)
 - * 재배 면적: $176 \rightarrow 205$ 천ha, 단가 인상: (조사료) $500 \rightarrow 550$ 만원/ha 등
 - ** 신규 품목: 수급조절용벼, 메밀, 수수, 율무, 알팔파 등
 - 신규 청년농의 논타작물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농지 임대 추진($1,700$ ha, 여의도 6개 면적)
 -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민간 RPC 벼매입자금 확대, 신규 쌀 품목별 자조금 단체 지원, 신규 김 계약재배 전용 융자 신설
 - * 확대 민간RPC 벼매입자금(융자 $1.3조 \rightarrow 1.4조$) , 신규 쌀 품목별자조금 단체 지원(29억) 신규 김 계약재배 전용 융자 신설(408억원)
 - 필수먹거리 소비 지원을 위해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설
 -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5.4만명)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농어촌 삶의질 제고 지원
- 인구소멸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0.2조원, 24만명)
 -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보험 대상 품목($9종 \rightarrow 14종$) 확대 및 신규 품목(5종) 도입
 -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및 해양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토 대청소 사업을 통해 농어촌 환경 개선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 고
▪ 농업·농촌	189,155	202,125	▪ 맞춤형 농지지원($11,134 \rightarrow 18,077$), 수입안정보험($2,078 \rightarrow 2,752$)
▪ 수산·어촌	31,931	34,541	▪ 신규 수산물계약생산융자(408), 수산물해외시장개척($546 \rightarrow 782$)
▪ 임업·산촌	28,408	31,918	▪ 사방사업($2,784 \rightarrow 3,185$), 산사태재난 경계피난($216 \rightarrow 324$)
▪ 식품업	9,383	10,184	▪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927 \rightarrow 1,158$) 등
합계	258,878	278,768	전년대비 +7.7%

9

국방 분야

- ◇ 보수, 급식·피복, 교육·훈련 등 장병 인적투자 전방위 확대
- ◇ 재래식 무기를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및 K-방산 육성

-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병 인적투자 확대
 - 추가 보수인상을 적용(최대 +6.6%),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
 - *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 확대(민간획득 부사관, RNTC 등)
 - ** 장기복무자(장기복무 전환자 포함) 대상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
 - 급식단가 인상(1.3→1.4만원/일), 지역상생자율특식 2배 확대(특식 4회+자율 증/특식), 신형 전투피복 전부대 보급 등 복무여건 제고
 - 전장병 AI·드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e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병 교육·훈련 강화
 - * AI 교육인원 전장병 확대(3→47만명), 교육용 드론 전부대 보급(0.3→11천대)
 - **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인원 확대(3→4만명), 맞춤형 e북 지원 신설(전체 병사, 분기당 2만권)
- 최근 드론 활용이 현대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 → 교훈을 토대로 미래전 대비 AI 기반 최첨단 무기 전략화 및 K-방산 육성
 - 한국형 최신 전투기(KF-21) 개발·양산(신규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포함, 1.3→24조) 및 축적된 역량 기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신규 636억원)
 - * 스텔스 브릿지 예산 반영(636억원) :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24억원), 스텔스 기능(구조, 소재 등)을 혁신·도전형 R&D로 추진(612억원)
 -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착수(신규 418억원)
 -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0.3→0.5조)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 고
▪ 전력운영	434,007	461,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0.03조원) · 급식단가 인상,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0.1조원)
▪ 방위력 개선	178,462	201,7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최신 전투기 양산 및 스텔스 전투기 연구(+1.1조원) · 첨단 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R&D(+0.9조원) · K-방산 육성 지원(+0.2조원)
합 계	612,469	662,947	전년대비 +8.2%

- ◇ ODA 규모를 정상화하고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
- ◇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반 구축 → 급변하는 국제정세 효율적 대응
-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정상화하고 사업 내실화에 집중, 국익 연계 실용적 ODA로 개편

-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0.7→0.3조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0.4→0.3조원)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저성과·중복사업 등은 효율화*

* 민간·국제 차관(0.8→0.3조원), 소규모 초청연수(11개 부처, 13개 사업) 통폐합

- 개도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는 확대*

* 신규 KOICA 개도국 산업인재 국내 학위연수·직무실습 지원(68억원), 핵심광물 기술 협력(80→108억원), EDCF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1.4→1.6조원) 등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지원*하고 새정부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지원**

* 미국 정세분석팀·주정부협력팀 신설, 고위급·실무급 회의 지원 확대 등(51→75억원)

** 지역별 외교전략 수립(9억원), 한·중앙아 정상회의(68억원)

- 공공외교 활성화(256억원), 신규 동포청년 국내 유치·정착지원(31억원)

□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0.8→1.0조)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 고
▪ 외교·통상 부문	66,563	57,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타분야 포함, 65,835→53,573) * 인도적 지원(6,775→3,315), EDCF(21,500→19,006) • 지역별 외교전략 수립(9), 한중앙 정상회의(68) • 신규 해외 동포청년 국내 유치·정착지원(31)
▪ 통일 부문	10,654	12,746	• 남북협력기금(7,981→10,003)
합 계	77,218	70,164	전년대비 △9.1%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 재해예방 인프라 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확충

- 현장경찰 인력보강 및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 개편, 교정 시설 안전 보강 등에 적극 투자
 - 신임경찰 충원확대(4,800→6,400명), 저위험층 확충 등 현장 즉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AI 기술 도입 및 마약장비 보강 등 수사역량 제고
 -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국선변호인 증원(254→274명), 회생법원 신설(3개소) 등 지원
 - 교정, 검찰, 경찰 등 시설에 대한 관행적인 투자를 축소하고, 재난안전 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0.2→0.3조원)
-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 및 AI·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 지자체 정비계획 기반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0.9→1.1조), **신규** 노후아파트에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50만 세대)
 -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신규** 드론-상황실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신규** 재난안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단위: 억 원)

	'25년	'26안	비 고
▪ 법원 및 현재	24,621	26,602	· 국선변호(780→946), 전문재판운영(23→252)
▪ 법무 및 검찰	46,212	49,285	· 마약수사(78→106), 범죄피해구조금(96→118),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214→278)
▪ 경찰	139,078	146,579	· 저위험권총(탄)(+167), 신임경찰 충원확대(+95),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15), 마약수사장비(+12)
▪ 해경	20,060	21,032	· 신규 시뮬레이터 구축(22), 항공기도입(378→666) 함정건조(1,571→2,025)
▪ 재난관리	36,547	54,886	· 재해위험지역정비(8,803→10,546), 신규 화재 연기 감지기 지원(72), 신규 재난드론-상황실 연계구축(34)
합계	250,031	272,114	전년대비 +8.8%

- ◇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 확대
- ◇ 지역 균형발전 및 과거사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AI 정부 실현을 위해 신규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206억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64→305억원) 등 지원
 -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54→74억원)을 바탕으로 부처 공통 AI 서비스, 지자체 표준 AI 모델 개발 지원
-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
 -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신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1조원)
 - 신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7,446억원)
- 지역 균형발전 및 과거사 극복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의무화로 안정적 발행을 지원(1.15조원)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19→32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정부자원관리	11,165	12,189	· 디지털배움터(+132),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206)
▪ 재정·금융	351,390	415,681	· 국고채 이자상환(249,644→291,639) · 국민성장펀드(+10,000), 청년미래적금(+7,446)
▪ 지방행정·재정지원	689,216	725,141	· 교부세(670,385→693,459)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1,500)
▪ 일반행정	36,527	36,423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184) · 경제총조사(14→663), 인구주택 총조사(1,158→56)
▪ 입법 및 선거관리	11,666	12,894	· 정당보조금(524→1,170),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88)
▪ 국정운영	6,745	8,410	· PBS 제도 개선(5,454→7,074)
합 계	1,106,710	1,210,739	전년대비 +9.4%

